

“□□□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국민 적으로 돌린 독재행위”

신수정 광주시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독재행위였다. 지역민들에게는 억압에 맞서 정의를 외쳤던 광주의 오월정신이 깃뻛히는 순간이었다. 시의회는 145만 광주시민과 함께 윤 대통령

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불법 권력 남용이 없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회복 불능 경제 상황 ‘탄핵’만이 답”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로 경제 상황이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빠른 탄핵 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그 중대성이 더 크다.

국민의힘 또한 탄핵 찬성으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실련은 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도입·국정조사 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

“민주주의 훼손... 국힘도 함께 책임져야”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훼손'이 2024년 비상계엄으로 다시 한번 발생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왔다. 특히 5·18을 겪었던 이들은 '유혈사태'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 여당인 국

민회의힘은 이 불온한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과 함께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 오는 14일 탄핵안 투표에서는 민의를 저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에 답해야”

김재관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당장 체포 구속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정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끝내며 헌정질서를 회복할 때가 됐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단 하나, 탄핵 뿐이다. 민

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탄핵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5·18 민주화의 성지 전남대 전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 가슴 벅찬 민주질서 회복에 앞장 설 것이다.

“정치인들, 원리원칙 따라 판단·행동을”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지켜 보면서 '이 자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국정운영을 일임한다는 발표를 듣고는 '권력 찬탈 행위'를 한다고 느꼈다.

44년 전 5·18 광주항쟁의 기억을 가진 이들이 느낀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시국에 정치인들이 할 일은 당을 떠나 원리원칙에 따라 판단·행동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철저히 국민·국가의 이익을 위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투표하길 바란다.

“독재 망령 재현... 소중한 일상 지켜내야”

김명준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순국선열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덕분이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은 공포정치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지만, 수많은 민주열사의 목숨을 건 용기와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 독재정권의 망령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한 내란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소외... 나라다운 나라를”

배영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약자를 포용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존재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 정부가 이 책무를 저버린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외교 사망선고 상태... 역사도 팔아 넘겨”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외교는 사망선고 상태다. 국제 사회에서는 기피 대상이다.

한국과 맺은 약속은 부도 어음 취급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여기고 있고, 각국은 자국 여행객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윤석열 때문이다.

역사도 팔아넘겼다. “100년 전

일로 더이상 일본에 무릎 꿇으라 할수 없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 떠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허용 등 일본이 하나를 원하면 두 개를 먼저 내줬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즉각 탄핵이 필요하다.

“윤 정권 반대 양곡법 개정안 시행돼야”

강제서 전남새농민회장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시행이 되더라도 국제통상 규범 위반, 농산물 수급 불

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방향타가 설정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위협 받고 있다는 현실적 경고”

박정래 직장인



12·3 계엄사태가 일어났던 날 밤, 또다시 군부 독재정권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5·18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시 군부 탄압과 폭력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적

인 경고로 다가온다. 국가의 지도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비민주적 조치를 방조하며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는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언론·출판 등 표현 자유 위해 탄핵 마땅”

정찬일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반헌법,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계엄군들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지난 1980년 오월광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무지막지한 포고령은 국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금지했다. 그동안 'K-컬처'라는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화적 위상이 정점을 치닫고 있을 때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틀막'을 강요하고 있다. 예술은 자유를 추구한다. 성역 없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민과 예술인들의 생명을 위해,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의 탄핵은 마땅하다.

“윤 담화로 내란 현재 진행형 확인돼”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비상계엄령만 해제됐을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내란은 끝나지 않음이 국민 담화로 확인됐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구속 수감돼 사형이 선고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도 내란의 수괴로서 곧 이 길을 가게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윤 대통령을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서 뒤서는 안 된다. 윤석열에 의해 무장한 군인들의 군화발에 짓밟힌 국회가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는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상항인식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은 결단코 탄핵돼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전통시장 활력 잃어”

박창순 말바우시장 상인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경제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핑계처럼 들릴 뿐이다. 말바우시장은 광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전통시

장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외중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경제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핑계처럼 들릴 뿐이다. 말바우시장은 광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전통시

“사회분열·경제침체 초래 용납할 수 없어”

김현화 예광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후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며 국정 혼란과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위주의적 통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국민 자유·권리 위협, 비민주적 조치”

이유지 직장인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제적 위축, 정치적 갈등,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비민주적 조치로, 국가의 헌법적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아래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